

# 글로벌 환경상품 · 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

**이주관**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 
jklee@kiep.go.kr

**조문희**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 
mhcho@kiep.go.kr

**강준구**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 
jgkang@kiep.go.kr

**김지현**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 
jihyeon@kiep.go.kr



## 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4. 부록

## 주요 내용

- ▶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, 복수국간 협상, 지역·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.
  - 2020년 WTO 내 '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(TESSD)'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 부터 환경상품·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.
  -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IPEF 및 FTA 협상에서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을 고려한 개방에 대한 입장 정립과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.
- ▶ 글로벌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18.6%,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5%를 차지 (2020년)
  - 우리 환경상품 수출입은 아시아권에 집중,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자 수입원임.
  - 환경상품 수입의 경우 FTA를 통해 미국·EU 100%, 중국은 60% 무관세 혜택을 봄.
  -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은 2013년 29조 원에서 2020년 34조 원으로 연평균 2.2% 성장함.
  - 최근 국내 환경서비스 투자는 정체된 상태이고, 기업규모는 영세한 편임.
- ▶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 측면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(① 비친환경 상품·서비스 통상규제 ② 친환경 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)으로 요약됨.
  - 첫째, 강화된 환경규범을 도입해 비친환경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억제하는 방법과 둘째,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춤으로써 관련 상품의 생산 및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있음.

## 주요 내용

- 수입국의 강화된 환경규범 도입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입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오염유발산업의 경우 추가적인 수입제한 효과 발생
  - 환경상품 시장개방 조치의 경우 상품시장만을 놓고 보면 전체 국가 참여 > 일부 국가 참여 > 중국 비참여 순으로 우리의 이익이 변함.
  -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우 일부 국가 참여 > 전체 국가 참여 > 중국 비참여 순으로 우리의 이익이 변함.
- ▶ 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임.
-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는 ① 환경상품 · 서비스 목록의 과학적 검증과 기후/환경 목록 분리 접근 제안 ② 개도국의 참여와 선진국의 지원 협력 유도 ③ 비관세장벽 투명성 · 예측 가능성 강화 요구가 필요함.
  - 국내에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①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합으로 시장개방 품목 선정 ② 개방에 따른 위험 요소 파악 ③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개선 ④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 ⑤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.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, 복수국간 협상, 지역·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임.
  - 기후위기 대응이 통상분야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 논의가 국가간 치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.
    -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(TESSD<sup>1)</sup>)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·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.
    - 미국·EU 등 높은 수준의 환경규범과 성숙한 시장을 가진 선진국이 다자 및 지역·양자 협상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음.
    - 영국-뉴질랜드, 싱가포르-호주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개방목록을 도출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협상에서 시장개방 논의를 주도함.
    - 2020년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는 호주·캐나다·멕시코·스위스·영국 등이 주축이 되어 전통적 환경서비스 분류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인접서비스까지 협상을 확대할 것을 논의함.
-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면서 우리의 입장 정립과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.
  -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교역이 연평균 2천억 달러를 넘고, 글로벌 환경상품 시장의 5%를 차지하는 주요 환경상품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각 협상 결과에 달린 이해가 큼.<sup>2)</sup>
  - 최근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는 ① 논의의 범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보다 확대되고 ②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졌으며 ③ 우리 정부가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기여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음.
  -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논의를 넘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시장개방의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.
-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결정과 대응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임.
  -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환경시장을 국제사회에 개방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째 주제이며, 둘째 주제는 이를 바탕으로 다자협상, 지역·양자 협상, 국내산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.

1)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al Discussion.

2)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WITS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환경시장 개방 현황

#### ① 환경상품<sup>3)</sup>

- 전 세계 기준(2020년), 전체 상품의 최혜국우대관세(MFN)의 실행관세율은 3.7%이나 환경상품의 경우 2.6%, 최저실행세율은 전체 상품의 관세율이 2.3%이나 환경상품은 1.7%로 상대적으로 낮음.
  - 미국·유럽·중국·한국 모두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대부분 5% 이하 범위에 분포
    - HS 코드 6단위 기준 최저실행세율 5% 이하인 품목은 미국이 95%, 유럽이 95.5%, 한국이 96%, 중국이 49.5%
-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18.6%를 차지,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상품 교역의 5%를 차지(2020년)
  - 환경상품 교역 증가율은 전체 교역 증가율보다 높아 2017~20년 사이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전체 교역은 전 세계 기준으로 연평균 약 2% 증가한 데 비해 환경상품의 경우 연평균 약 6.5% 증가함.
  - 기존의 협상 참가국 중에서 수출은 중국, 유럽, 미국, 일본, 홍콩, 한국 순으로 많으며, 수입은 중국, 유럽, 미국, 홍콩, 한국, 일본 순으로 많음.
-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과 수입은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수입원임.
  - 부문별로 보면,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과 수입에서 재생에너지 플랜트, 폐수관리 및 정수처리, 청정·고효율 기술 및 상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.
  - 수입관세는 미국과 유럽의 환경상품 수입 전 품목에 대해 FTA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하며,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환경상품 역시 대부분(98%) 무관세인데 중국산 환경상품의 경우 60%만 해당함.

#### ② 환경서비스

- 핵심환경서비스의 양허 수준은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개방 약속 수준이 가장 높고, 그다음은 미국이며, 브라질과 인도는 핵심환경서비스의 대부분이 미양허 상태임.
  - 우리나라의 경우 위생 및 유사 서비스(CPC 9403)가 미양허 대상이고, 그 외의 환경서비스 중분류(6.A~D)에서는 하위의 일부 분야만 양허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.
  - 환경연관서비스의 양허 수준은 한국·미국·호주·스위스·일본·뉴질랜드 등은 높게 나타났고 EU·캐나다·중국 등은 앞의 국가들보다 양허 수준이 다소 낮음.

3) 본 연구에서는 환경상품의 범위를 WTO(2016년 목록)와 OECD의 통합환경상품 목록(2014)을 통합한 HS 6단위 목록을 사용함.

-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산업 규모는 2013년 29조 4천억 원에서 2020년 34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2.2% 성장함(환경산업통계조사).
  - 2020년 기준 매출액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자원순환관리(30.8%)이며, 그다음은 물관리(30.0%), 지속가능 환경자원(17.7%), 환경 지식·정보·감시(13.65%), 기후대응(3.5%), 환경안전보건(1.6%), 대기 관리(0.9%)의 순
  -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,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분야 투자는 정체된 상태이고 기업 규모는 영세한 편임.

## 2) 환경시장 개방을 위한 환경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<sup>4)</sup>

- 강화된 환경규범 도입은 비친환경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줄여 환경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수입장벽의 기능을 할 수 있음.
  - 대표적으로 EU가 2023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, 미국·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사례가 있음.
-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에서 양자간 수입 자료와 국가의 환경규범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WTO 환경 데이터베이스(<https://edb.wto.org/>)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국가의 환경 관련 조치(environmental related measures) 건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환경규범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- 분석 결과 수입국의 높은 환경규범 수준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해 수입감소 현상이 나타남.
  - 수입국의 환경규범 수준과 수출국의 환경규범 수준 차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(-)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국 대비 수입국의 환경규범 수준이 높아질수록(혹은 낮아질수록) 수입은 감소(혹은 증가)함.
  - 산업별로 분석하였을 때, 고무·플라스틱·화학 산업의 경우 수입국의 환경규범 도입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산업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식별되지 않음.

## 3) 환경시장 개방 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<sup>5)</sup>

- 환경상품·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시장개방협정 체결은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비용을 낮춤으로써 관련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무역비용을 낮춰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함.
  - 시장개방협정에 참여하여 관세 및 비관세를 낮춰 역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에 해당하며

4) 자세한 결과는 부록 1) 참고.

5) 자세한 결과는 부록 2) 참고.

APEC 환경상품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임.

- 일련의 시장개방 관련 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달성되었을 때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  -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조치의 국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에 국제무역 구조와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 규모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함.
    - 아시아개발은행의 ADB-MRIO(다지역산업연관데이터)와 UN의 글로벌 관세 및 교역 데이터를 활용
  -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·철폐한 상황을 가정하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.
  
- 환경상품시장의 경우 참여국만 환경상품목록의 관세를 0으로 낮추는 시나리오 1과 중국이 TESSD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인 시나리오 2, 모든 국가가 환경협정에 참여한 경우인 시나리오 3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고,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 - 시나리오 1: 우리나라의 수출 및 생산 증가 > 참가국의 수출 및 생산 증가 > 비참가국 수출 및 생산 증가
  - 시나리오 2: 중국 불참 시 참가국의 후생증가율 감소, 우리나라도 큰 폭으로 생산 및 수출 감소 발생
  - 시나리오 3: 모든 국가가 환경상품협정에 참여할 경우 시나리오 1에서 참가한 국가들은 수출이 더 크게 증가, 우리나라 역시 시나리오 1에 비해 더 큰 후생효과가 발생, 개도국의 경우도 생산 및 수출증가 효과 발생
  
-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우 참여국만 시장개방을 했을 경우인 시나리오 1과 중국이 TESSD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인 시나리오 2, 모든 국가가 환경협정에 참여한 경우인 시나리오 3을 설정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 - 시나리오 1: 참가국의 수출 증가 > 비참가국, 우리나라는 참가국 평균보다 낮은 생산 및 수출 증가 발생
  - 시나리오 2: 중국 불참 시 참가국의 후생증가율 감소, 우리나라는 생산 및 수출 감소
  - 시나리오 3: 모든 국가가 환경서비스협정에 참여할 경우 시나리오 1에서 참가한 국가들은 수출이 더 크게 증가, 개도국은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 발생



### 3. 정책 제언

#### 1)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기여

● 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

-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 확립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환경
  - 환경상품·서비스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시장이 개방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이 함께 수립됨을 의미
- WTO의 환경시장 자유화 논의 걸림돌 해소에 기여
  - ① 환경상품·서비스 목록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②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③ 비관세 장벽 포함 여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야 함.
  - 이후 입장이 유사한 회원국과 의견을 공유, 교착원인 해소에 노력

#### ① 환경상품·서비스 목록의 과학적 검증과 기후/환경 목록 분리 제안

● 환경상품·서비스 목록을 선정할 때 각국이 제안한 목록을 바탕으로 하되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지지

- 각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환경상품 목록에 포함하였으며, 그로 인해 환경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도국들이 반대해왔음.
  -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각 나라가 제안한 목록을 통합하여 검토하도록 제안

● 환경상품과 기후변화 대응 품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협상하는 방안 제안

- 당면한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협상의 대상으로 선정
  - 기후변화 대응의 환경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저탄소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방할 것을 우선 논의
- 과거의 환경상품 목록을 기반으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또다시 유사한 쟁점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.
  - 2016년 WTO EGA 협상에서 환경상품을 규정할 때 각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품목을 선택하고 국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나 관세가 높은 품목은 제외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

#### ② 개도국의 참여와 선진국의 지원 협력 유도

●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국가로서 개도국·선진국 간 가교역할 수행

- 개방이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개도국에 설득



- 중견국가로서 개방을 통한 성장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며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개도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임을 설득
- 개도국 역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개방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개도국의 협상 참여를 유도
- 개도국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고 환경시장 개방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환경과 무역 관련 논의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, 최대 수출시장인 선진국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
-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환경 관련 기술 이전 등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 제안
  - 2010년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UNFCCC에 Technology Mechanism이 설립되었지만 선진국의 기술이전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조직능력 등)은 개도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.
  - 개도국의 환경상품·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제공해야 함.
-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환경협정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개도국 상황을 반영한 환경협정 논의를 진행
  - 개도국에 유예 기간을 주고 단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방안

### ③ 비관세장벽 투명성·예측 가능성 강화 요구

#### ● 비관세장벽에 대한 투명성 강화 원칙을 강조할 필요

- 국제적으로 환경규범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일부 환경규범은 무역장벽으로 작용 가능
  - 특히 선진국의 일방주의적 환경조치는 개도국에 더 높은 순응비용 또는 적응비용으로 다가옴.
  - 친환경산업에 대한 선진국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음.
  - 선진국에 비해 오염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환경 관련 규범 도입으로 개도국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음.
-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 형성을 통해 무역왜곡적 조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.

#### ● WTO의 환경 관련 통보 및 조치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

-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각국의 환경 조치 관련 통보가 투명하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상품·서비스 협정에 포함하여 데이터 정확도 제고
- 개도국이 통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개도국의 정책 형성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

## 2) 지역·양자 간 통상규범 속 환경상품·서비스 무역 확대 규범 형성에 참여

- 지역 내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이슈로 다루며 환경 관련 규범을 포괄하는 IPEF 등 지역간 통상규범에 우리의 요구를 적극 제안
  -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, 상품·서비스가 역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관련 표준, 기술협력, 서비스 진출 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
    - 기존 FTA에서 나왔던 환경상품·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교역 원활화를 위한 규범 형성, 나아가 비친환경 상품에 대한 교역 제한 등 다양한 세부 이슈를 포함
  - 일방적 환경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범 도입 요구
  - 우리의 환경상품·서비스가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제정, 생애주기에 따른 배출원 측정, 레이블링 등을 준비해야 함.
  - 비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제한 역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요구
- 양자 간 관계를 활용하여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
  - 현재 우리나라 FTA는 환경상품·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노력 조항으로만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음.
  -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,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국가간 협력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채널로 FTA를 활용
    - 환경상품·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안정적 공급망, 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 관련 협력 챕터를 보완

## 3) 국내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체제 정비

### ①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합으로 시장개방 품목 선정

- 환경상품 목록과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기존의 상향식(bottom-up) 의견 수렴 방식과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정책에 부합하는 품목을 선정하는 하향식(top-down) 방식을 함께 고려
  - 녹색성장(그린뉴딜) 투자대상 품목과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정
    - 녹색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산업과 관련 품목을 정의하고 있고, 녹색성장 투자대상 품목은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환경성과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선정하는 데 활용 가능
  -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고, 우리의 유망산업과 정책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을 선정한 후 일반기업과 협회·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

## ② 개방에 따른 위험 요소 파악

### ● 논의의 세부사항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

- 환경상품·서비스 중 일부는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양허와 관련해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.
  -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잔여 관세 및 양허 제외 품목이 다수 존재
  - 추가 개방에 따라 일부 개도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혹은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
- 중국이 환경상품·서비스 협정에 참여하여 환경상품 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재 관세로 보호되는 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.
  - 중국은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수출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시장은 상당 부분 관세로 보호하고 있음.

## ③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개선

### ●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필요

- 향후 환경상품·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환경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음.
  - 주요 수출국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된 점, 1천억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 중 한국의 수출이 유일하게 정체상태(-0.3%)<sup>6)</sup>에 있는 점이 위기요인임.
-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필요
  - 기업의 규모에 따라 환경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는 기술 개발 보조, 사업화 등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,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, 안정화에 도달한 기업에는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돕는 방식의 개선 필요
- 개별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노출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 정부가 협력
  -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해외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계
  - 스타트업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 관련 기술을 상품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도록 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함.
- 해외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역상대국이 시행하는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강화
  - 정부는 FTA를 통해 양국간 수출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, 녹색성장 분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관련 기술의 개발과 투자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
6) 중국, 유럽, 홍콩 모두 5% 이상 성장하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0.2%, 0.3% 성장함.

#### ④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

##### ● 환경서비스의 추가적인 양허 개선에 대비

-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무역장벽은 여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, 베트남, 카자흐스탄, 태국, 러시아, 튀르키예 등 개도국보다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추가적인 양허 개선이 필요

##### ● 국내 환경서비스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 재평가 및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유지 필요성을 조속히 검토

-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이 영세하긴 하지만 국내시장은 여타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도 증가하고 있음.

- 시장의 보호조치 대신 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보유하는 환경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대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
-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국내 환경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

#### ⑤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

##### ● 무역과 환경 논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

- 국제 통상 질서에서 환경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.

- 환경산업에 대한 적극적 인식 전환 필요

- 지금까지 환경상품·서비스는 산업과 환경이라는 분리된 분야로 인식돼 왔으나, 산업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함.
-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 고려하여 해당 품목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환경적 고려가 보충되어야 하며, 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산업적 육성 방안과 보호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함.

##### 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상품에 대한 평가제도와 환경서비스에 대한 보조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

- 정부, 기업, 협회·단체 등은 환경 관련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. **KIEP**

## 부록

### 1) 환경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주요 결과

부록 표 1. 전체 품목 분석 주요 결과

구분	전체 품목		
	모형 1	모형 2	모형 3
log(수출국 GDP)	0.186*** (0.0106)		
log(수입국 GDP)	0.575*** (0.0101)		
RTA	0.0457*** (0.00645)	0.0659*** (0.00755)	0.0580*** (0.00750)
환경 관련 조치 차이	-6.70e-05*** (5.57e-06)	-0.297*** (0.0932)	-0.290*** (0.0933)

주: 1)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. 괄호 안은 강건 표준 오차임.

2) \*\*\* p<0.01, \*\* p<0.05, \* p<0.1.

자료: 저자 작성.

부록 표 2. 산업별 주요 분석 결과

	비제조업	고무, 플라스틱, 화학	목재	섬유
RTA	0.0339** (0.0157)	0.0468** (0.0200)	0.0809** (0.0346)	0.0832*** (0.0162)
환경 관련 조치 차이	0.00144 (4.139)	-0.764*** (0.240)	0.569 (0.623)	0.000442
관측치	1,003,959	519,947	179,874	748,018
RTA	금속, 비금속 0.0684*** (0.0200)	전자, 전기기기, 기계 0.00129 (0.0478)	차량, 항공기 0.0206 (0.0334)	광학, 측정 및 검사, 의료기기 -0.0330 (0.0461)
환경 관련 조치 차이	-0.150 (0.279)	0.00218 (68.19)	0.196 (0.468)	0.00111 (71.83)
관측치	491,745	85,666	169,894	93,7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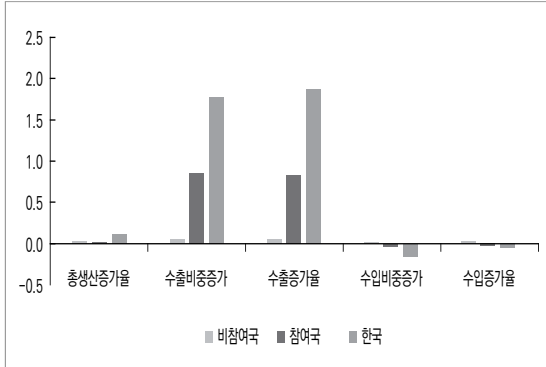
주: 1)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. 괄호 안은 강건 표준 오차임.

2) \*\*\* p<0.01, \*\* p<0.05, \* p<0.1.

자료: 저자 작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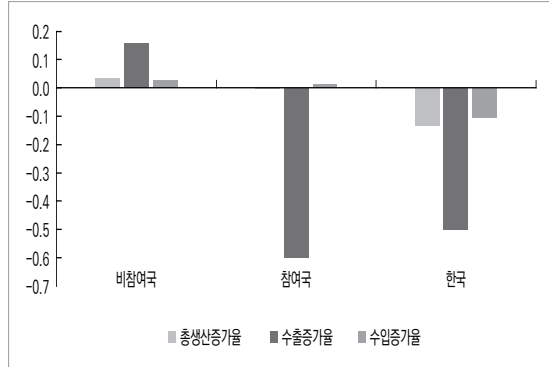
## 2)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 분석 주요 결과

부록 그림 1. 환경상품 시장개방의 영향(일부 국가 참여)  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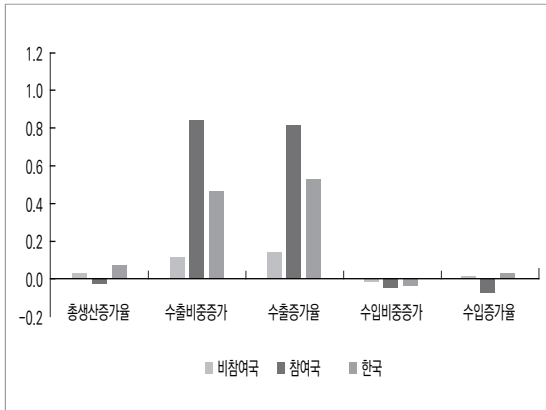
주: 비참여국, 참여국의 값은 교역변화율의 가중평균임.  
자료: 저자 작성.

부록 그림 2. 환경상품 시장개방 영향(중국 불참 시)  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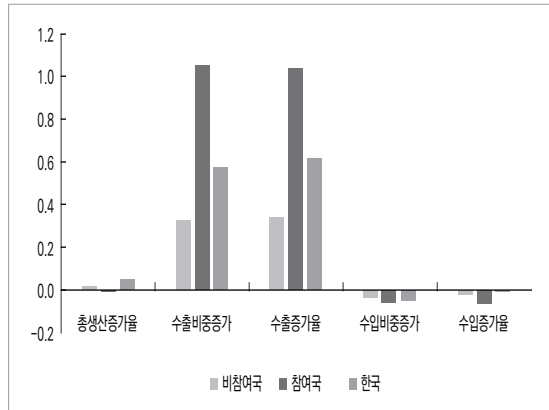
주: TESSD 협정에 중국이 참여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총생산, 수출증가율, 수입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함.  
자료: 저자 작성.

부록 그림 3.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영향(일부 국가 참여)  
(단위: %)



주: 비참여국, 참여국의 값은 교역변화율의 가중평균임.  
자료: 저자 작성.

부록 그림 4.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영향(전 세계 참여)  
(단위: %)



주: 비참여국, 참여국은 이전 시나리오에서의 구분이며, 해당 값은 교역변화율의 가중평균임.  
자료: 저자 작성.